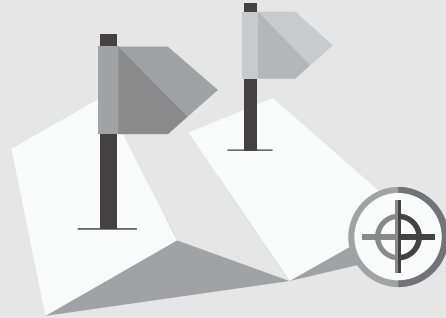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생계비 지출 수준 비교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김태완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의료비 지출 부담
김기태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
여유진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
이주미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
김기태·이주미

[부록]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구 지출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¹⁾

A Study on the education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여유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구 간 교육비 지출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양 측면 모두에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한국의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11.1%, 4인 가구 16.2%로, 1% 내외인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물론이고 2~8.5% 수준인 남유럽과 영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역시 한국은 전체 가구 17.1%, 4인 가구 19.2%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가구 교육비 부담과 교육 투자 격차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생애주기 간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 낮은 아동 행복도와 저출산 등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연대 가치를 침식하는 만큼 공적 교육 투자에서의 적극적 조치 강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²⁾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이를 둘러싼 ‘비용’만큼 큰 쟁점이 되는 소재도 드물 것이다. 세계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을 이루어 낸 데는 교육의 힘이 지대한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 불평등, 불공정성 논란과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교육 투자의 과잉과 학교 서열화로 인해 학벌주의와 능력주의가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원(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2) 이 글을 쓰기 위한 연구 방법은 부록을 참고할 것

과열됨으로써 올바른 시민을 키워 내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펼치는 장으로서의 학교와 교육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최근에는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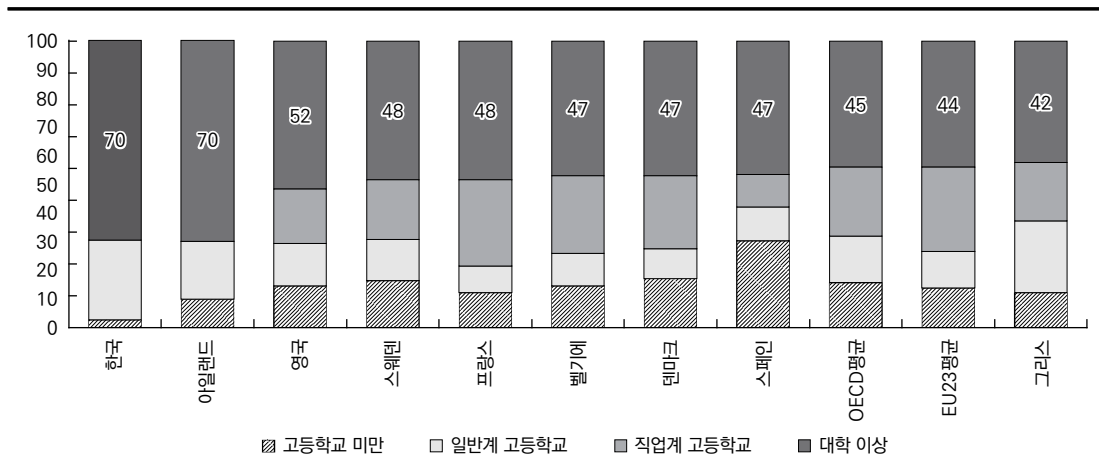
과도한 교육열, 학교 서열화와 공정성 논란이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워도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임은 분명하다. 25세에서 34세까지의 학력 수준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25~34세 인구 중 70%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글의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아일랜드(70%)³⁾와 영

국(52%)을 제외하고는 40%대의 고등(tertiary) 교육 취득률을 보이며 OECD 평균과 유럽연합(EU) 23개국 평균도 각각 45%, 4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OECD, 2020).

이와 같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그 결과 높은 교육 성취-과 '좋은 학교와 학과'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가구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과 유럽 8개국의 세 가지 가구 유형별⁴⁾ 교육비 지출 부담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구 간 교육비 지출 격차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자는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후자는 소득 5분위별 교육비 지출

그림 1. 비교 국가에서 25~34세의 교육 성취(2019년)

(단위: %)



자료: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 Figure A1.1. <https://doi.org/10.1787/888934161843>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가 그림.

3) 아일랜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지만 미국, 영국, 한국 등과 달리 대학의 서열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들은 모두 평균적이고 균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 전체 가구, 16세 미만 아동 1명과 부부 가구, 16세 미만 아동 2명과 부부 가구.

부담의 격차와 지니분해(gini decomposition)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⁵⁾

2. 가구의 교육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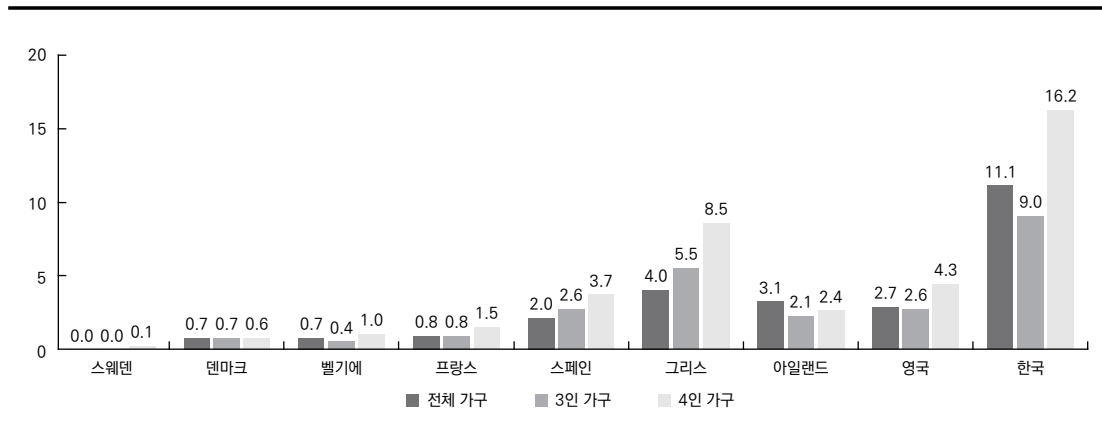
[그림 2]는 가구 유형별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교육비가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 간 큰 편차가 존재한다. 노르딕 두 개 국가(스웨덴과 덴마크)와 유럽 대륙 두 개 국가(벨기에와 프랑스)에서 가구의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은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남유럽 두 개 국가(스페인과 그리스)와 영미권 두 개 국가(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교육비 지출은 앞선 나라들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대체로 5% 이내였다. 다만 그리스에서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이 각각 5.5%와 8.5%로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에서 교육비 지출이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구 유형에 따라 9.0~16.2%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높은 교육비 지출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민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점이다. 먼저, [그림 3]에서 보듯이 국내총생산(GDP) 대

그림 2. 가구 유형별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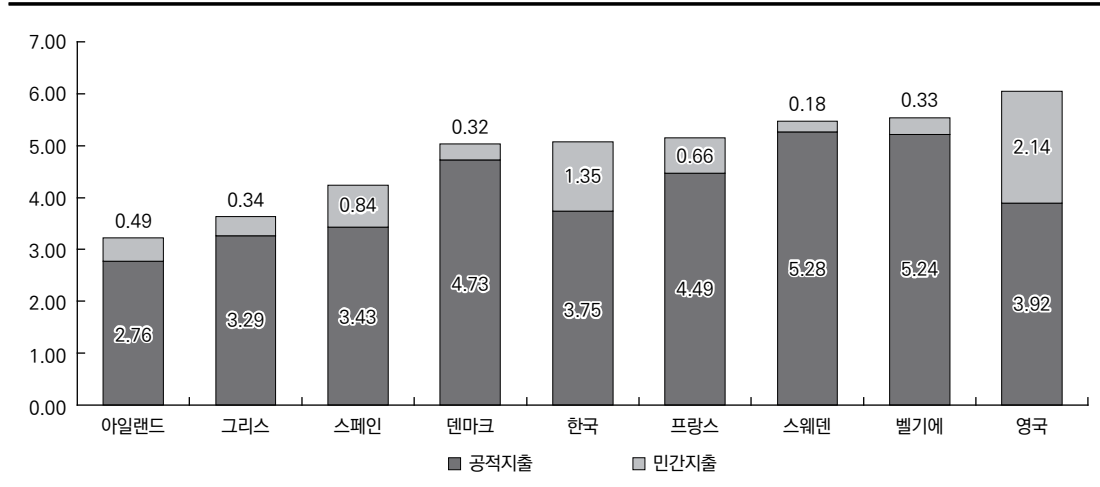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14).

5) 자료와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록과 사사 표기된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3. 비교 국가의 GDP 대비 공교육에 대한 지출

(단위: GDP 대비 %)



주: 공교육 지출은 공식 교육, 즉 초중등(primary, primary to post-secondary non-tertiary levels)교육과 고등(tertiary levels)교육에 드는 비용임.
 자료: OECD. (2021b). *Public spending on education(indicator)*. doi: 10.1787/f99b45d0-en; OECD. (2021a).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indicator)*. doi: 10.1787/6e70bede-en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및 그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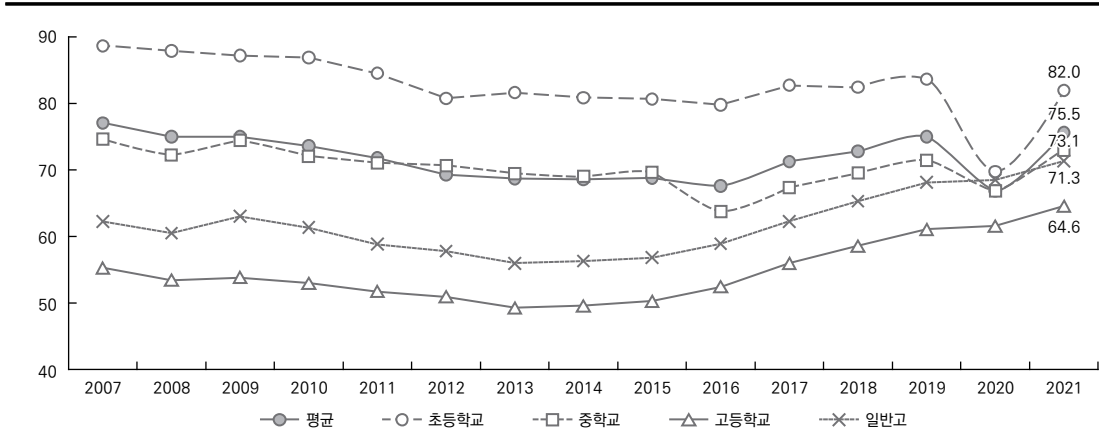
비 공적 교육비 지출의 비율은 대체로 노르딕, 유럽 대륙 복지국가에서 높고, 영미, 남유럽 복지국가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공교육에 대한 민간 지출은 영국에서 GDP 대비 2.14%로 두드러지게 높고, 한국도 1.35%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투자 수준이 높다. 각국의 사교육 현황 조사 보고서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년 조사의 8학년과 12학년 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종재, 이희숙(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등교육 단계 사교육 참여율은 한국 77%, 일본 75.7%, 대만 81.2%, 베트남 76.7%로 매우 높았다. 이는 캐

나다(20%), 미국(11%), 독일(21%), 그리스(8%) 등 사교육 참여율이 20% 안팎에 불과한 서구 국가들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의 2~5세 영유아 사교육 참여 현황을 조사한 김은영 외(2017)의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주당 평균 이용 프로그램 수(2.2개)와 평균 이용 횟수(1.7회)가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평균 75.5%로 약 4명 중 3명의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적어도 하나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또한 가구의 월평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2021년에 36만 7천 원에 달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3. 11.)

그림 4. 한국의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3. 11.).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3에서 2022. 6. 13. 인출 자료를 활용하여 그림 작성.

요컨대, 노르딕과 유럽 대륙 복지국가들은 공히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순수 사교육비 지출 역시 낮기 때문에 교육비가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페인과 특히 영국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각각 GDP의 0.84%와 2.14%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가구의 교육비 지출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비교 대상국들 중 가구 교육비 지출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 비율이 GDP의 1.35%로 영국 다음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교육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참여율과 비용이 높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가구 간 교육비 부담의 격차

가.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교육과 사회 이동, 공정성 이슈 등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표 1>은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르딕 2개국⁶⁾과 유럽 대륙 2개국의 경우 교육비의 절대 비율 자체가 워낙 낮아서 소득 분위별 비율 차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이에 비해 남유럽 2개국과 영미권 2개국의 경우 하위 1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6) 스웨덴의 경우 3인 가구 중 2분위 가구에 균등화된 교육비가 31126.11유로인 극단값이 포함됨으로써 전체 비율을 왜곡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참고로 3인 가구 전체의 교육비 지출 평균액은 11.30유로(극단값 제외 평균값)이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 비율 또한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은 1분위를 포함해 대체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절대액 비 비율 또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소득 분위가 상승할수록 교육비 지출-절대액

표 1. 가구 유형별·소득 분위별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가구 유형	국가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 가구	스웨덴	0.1	0.0	0.0	0.1	0.1	0.0
	덴마크	0.2	0.4	1.1	1.0	0.5	0.7
	벨기에	0.7	0.8	0.6	0.7	0.8	0.7
	프랑스	1.4	0.5	0.6	0.6	1.1	0.8
	스페인	1.2	1.3	1.8	2.0	2.9	2.0
	그리스	3.1	3.0	3.7	4.6	4.5	4.0
	아일랜드	4.3	2.3	2.5	3.3	3.3	3.1
	영국	1.7	1.1	2.9	3.1	3.6	2.7
	한국	7.0	10.2	11.7	12.6	11.6	11.1
3인 가구: 부모+한 자녀	스웨덴	0.2	0.0	0.0	0.0	0.1	0.0
	덴마크	0.2	0.1	2.1	0.5	0.3	0.7
	벨기에	0.1	0.4	0.7	0.4	0.2	0.5
	프랑스	1.4	0.4	0.6	0.7	1.1	0.5
	스페인	1.6	1.6	1.8	2.8	3.6	1.8
	그리스	3.2	3.1	4.6	6.2	6.9	4.0
	아일랜드	1.1	1.5	1.4	2.6	3.0	1.9
	영국	0.8	0.8	3.2	2.4	4.1	2.3
	한국	6.2	7.1	8.2	7.8	11.8	9.0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스웨덴	0.0	0.0	0.0	0.2	0.0	0.0
	덴마크	0.6	0.4	0.5	0.8	0.6	0.6
	벨기에	1.2	1.8	0.7	0.9	0.7	1.0
	프랑스	2.4	0.6	1.1	1.1	2.1	1.5
	스페인	1.8	2.1	3.1	4.0	5.4	3.7
	그리스	5.9	6.6	9.8	8.2	10.2	8.5
	아일랜드	1.3	1.6	3.1	1.9	3.3	2.4
	영국	4.0	0.9	1.9	3.7	7.9	4.3
	한국	13.5	13.9	16.9	17.1	16.8	16.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17, 119, 121).

7) 이는 통계청과 교육부의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2021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 3천 원으로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11만 6천 원)의 5.1배에 달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3. 11).

이 아니라-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투자의 실질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표 2〉는 총소비지출의 2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교육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소득 분위별로 산출한 결과이다. 노르딕 두 개 국가(스웨덴과 덴마크)에서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제로(0%)에 가깝다. 유럽 대륙 두 개 국가(벨기에와 프랑스)도 총소비지출의 2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거의 모든 분위에서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 그리스와 영국의 경우 중산층 이상에서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영국에서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은 사립학교와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높은 것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교육비 과부담 가구 비율은 여타 분석 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20% 이상을 교육비로 쓰는 가구는 평균 19.51%에 이르렀으며, 3, 4, 5분위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나. 교육비 지출의 총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 (지니분해 결과)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력, 즉 기여도를 분석한 지니분해 결과는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⁸⁾

표 2. 소득 분위별 교육비 과부담(20% 이상) 가구의 비율(전체 가구)

(단위: %)

	국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총소비지출 대비 20% 이상	스웨덴	0.00	0.00	0.00	0.00	0.00	0.00
	덴마크	0.00	0.00	0.00	0.00	0.00	0.00
	벨기에	0.52	0.23	0.34	0.15	0.41	0.33
	프랑스	1.42	0.26	0.16	0.23	0.67	0.55
	스페인	0.38	0.51	1.02	0.84	1.71	0.89
	그리스	1.88	3.12	3.37	7.04	4.35	3.95
	아일랜드	3.52	1.82	1.07	1.97	2.45	2.17
	영국	1.68	1.05	2.27	2.44	5.63	2.62
	한국	10.59	18.26	21.82	23.71	23.17	19.51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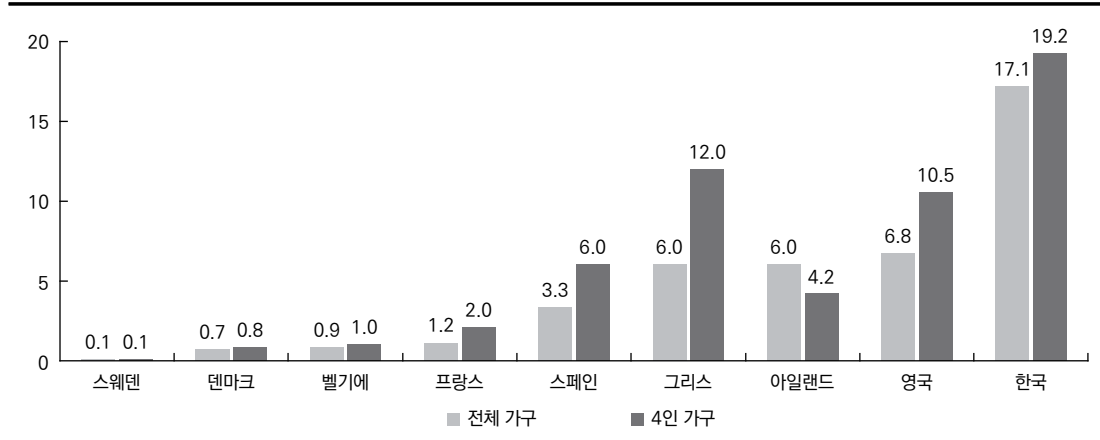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재인용(p123).

8) 소비지출 지니분해는 개별 소비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미친 영향, 즉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총소비지출 지니계수는 개별 비목들의 절대적 기여도 합으로 표시된다. 자세한 분석 방법은 사사 표기된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5. 교육비 지출의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단위: %)



주: 총소비지출 지니계수를 100으로 볼 때 교육비가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기여한 몫을 비율로 표시한 값임.
 자료: 유럽 8개국 - Eurostat. (n.d.).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한국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노르딕 국가와 유럽 대륙 국가에서 교육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해 매우 낮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나라에서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 교육은 집합적 재화이며 공공재, 메리트재로 인정되고 있고 대부분 공적 지출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가구의 교육비 부담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의 스페인, 그리스와 영미권의 아일랜드, 영국은 이들 나라보다는 교육비 부담이 크고, 특히 의무교육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사부담액이 상당하므로 앞선 노르딕 국가나 유럽 대륙 국가에 비해서는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교육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에서 3.3~6.8%, 4인 가구에서 4.2~12.0%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가구 교육비 지출은 전체 가구 소비지출 불평등의 17.1%, 4인 가구 소비지출 불평등의 19.2%를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 편차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나가며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가능케 한 수단이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계층 상승의 중요한-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쳇말로 ‘우골탑’이나 ‘개롱남’ 같은

용어가 이를 대변해 준다.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적 시민의식 수준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교육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은 그야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얽혀 있다. 가구 교육비 지출의 국가 간 비교 결과는 그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한국은 비교 대상 유럽 8개국에 비해 가구 교육비 지출이 현저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투자 격차도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부수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 첫째는 국가적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의 문제이다.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교육에 훨씬 더 높은 금전적·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가구의 부담 능력에 따라 교육 투자의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출발 선상의 비형평성을 초래한다. 둘째,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불균형 분배 문제이다. 복지국가는 생애주기 간 소득 분배를 통해 소비를 평탄화(안정화)하는 기제이다. 하지만 경제활동기에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 투자에 몰입함으로써 사회보험료를 통해서 건 사적 저축을 통해서건- 노년기 준비 여력을 낮추고 미래 빈곤 가능성을 높이게 될 수 있다. 물론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셋째, 아동의 낮은 행복도와 저출산의 관련성이 다. 교육에의 '과몰입'은 단순히 금전적 비용 부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투여,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의 다양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2018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6.6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류정희 외, 2019). 또한, 오늘날 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자녀 양육비 부담은 초저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월렘 아테마는 포괄적인 영유아 교육·돌봄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는 원인으로 사교육비를 꼽았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넷째, 높은 불평등과 사회이동 저하의 문제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산업화 시기 동안 교육은 계층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은 계층이동의 수단이기보다는 계층 고착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여유진, 2019). 이 장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바, 고소득층일수록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더 많은 교육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좋은 라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⁹⁾ 마지막으로, 교육(투자)과 그 결과의 성취물(노동 시장에서의 대가)이 사유재로 인식됨으로써 복지

9) 그 결과는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 계열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및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월 소득 1,38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인 10분위 자녀가 의약대생의 36.4%, 로스쿨생의 31.9%로 나타났다. 더구나 고소득층 학생 비율은 의학생의 경우 2016년 54.9%에서 2019년 65.4%로 증가했고 로스쿨에서는 같은 기간 53.6%에서 54.1%로 늘었다(박영태, 2019).

국가의 기반이 되는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노르딕 복지국가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의 거의 모든 단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양육과 공교육을 구현하고 있다. 물론 그 자체가 복지국가의 주요 프로그램이기도 하려니와 그 결과의 산물, 즉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물은 사회와 시민이 함께 일궈 낸 성과이므로 세금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연대와 신뢰 의식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높은 사교육 투자와 교육의 '사유재화'는 그 성취물의 '사취'가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복지국가의 선순환적 환원 구조가 정착하는 데 어려운 토양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교육의 사유재적 성격과 능력주의적 성격이 결합할 경우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 있고 공정성의 개념도 이에 따라 변질될 우려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대, 경제·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아진 교육에의 사적인 과잉 투자를 낮추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지만 선불리 이를 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교육 투자의 격차를 완화하는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공적 교육 투자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에 대한 투자는 보편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취약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장학금제도,

사배자 전형 등은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왜소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드림스타트와 같이 저소득 아동의 잠재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재능을 개발하고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제한된 '좋은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 서열화도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낮은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서 '괜찮은 일자리', '나쁘지 않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간접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교육을 둘러싼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일자리의 질이 비교적 균질하고, 사회임금(social wage)을 통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완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낮은 일자리 질을 높이고 사회임금·사회보장제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시민교육, 각종 매체를 통해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 협력과 공존의 가치, 나아가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저부담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공유하는 장(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김태완. (2021).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영, 김근진, 윤지연, 김민지, Peng, C. C., 정광희, Kristiina, S. N. (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I)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태. (2019. 10. 7.). 돈 많으면 의대·로스쿨? 절반은 소득분위 최상위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590&cID=10201&pID=10200에서 2022. 6. 13. 인출.
- 여유진. (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61-81.
- 위키백과, (n.d.). 아일랜드.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D%BC%EB%9E%9C%EB%93%9C#%EA%B5%90%EC%9C%A1>, 2021. 10. 11. 인출
- 이종재, 이희숙. (2008).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 기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03-22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블로그]. (2019. 10. 30.). OECD, 아동·가족 정책의 걸림돌로 사교육을 지목하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2019 국제인구 컨퍼런스 현장 (하)].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1693400670>에서 2021. 11. 16.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3. 11.).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에서 2022. 6. 13.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3. 11.).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에서 2022. 6. 13. 인출.
-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 Eurostat. *Household Budget Survey [HBS]*. raw data. Eurostat.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OECD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888934161843> 2021. 9. 18.
- OECD. (2021).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indicator)*. doi:10.1787/6e70bede-en
- OECD. (2021). *Public spending on education(indicator)*. doi:10.1787/f99b45d0-en

A Study on the education expenditure burden of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Yeo, Eu-gen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ur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both the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 burden and the education expenditure gap between households of different economic levels were significantly larger in Korea than in the comparable countries. Education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11.1% for all households and 16.2% for four-person households in Korea,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households in Southern European and British countries (2~8.5%) as well as in Nordic and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 (around 1%). Our Gini decomposition analysis found that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nequality was higher in Korea (17.1% for all households and 19.2% for four-person households) than in the other countries. This high education cost burden and differences in education investment by household economic status result in inefficiency at the state and individual levels, a high rate of elderly poverty, low child happiness and low birth rate, and fundamentally erode the welfare state's solidarity value.

부록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구 지출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

이번 연구는 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나누어 유럽 8개국과 비교 분석한 것이다.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설정했다.

첫째,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으로부터 유럽 28개 국가 가계의 지출 항목을 담은 **가구지출설문(HBS: 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 **가계동향조사** 비목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두 조사 모두 가계 지출 항목의 기준으로 국제 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0).

둘째, 두 자료를 이용해 **유럽의 네 가지 체제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를 각각 두 개씩 골라 한국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유럽의 여덟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북유럽 모델), 프랑스와 벨기에(보수주의 모델), 영국과 아일랜드(자유주의 모델), 스페인과 그리스(남유럽 모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해당 국가 통계청의 비협조와 자료의 일부 변수값 부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누락됐다.

셋째, 가구 유형을 ① 전체 가구 ② 노인 단독 가구(65세 이상) ③ 4인 가구(부모+자녀 2인)로 나누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교육비 분석에서는 교육비 지출 액수가 적은 노인 단독 가구 대신 3인 가구를 포함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자녀 연령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자녀의 연령을 만 16세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럽은 그러한 사례가 적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유럽 가구지출설문 자료상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스웨덴 등)가 존재하고, 별도로 구분해 둔 가구 유형에서 자녀의 연령 기준을 16세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넷째, 필수재의 범주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한정했다. 우선 집합재로서의 4개 범주(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를 대분류 기준으로 정하여 분석했다. 한국 가계동향조사와 유럽 가구지출설문 모두 가계 지출의 범주를 ① 식료품·비주류 음료 ② 주류·담배 ③ 의류·신발 ④ 주거¹⁾·수도·광열 ⑤ 가구용품·가사서비스 ⑥ 보건 ⑦ 교통 ⑧ 통신 ⑨ 오락·문화 ⑩ 교육 ⑪ 외식·숙박 ⑫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물론 ① 식료품·비주류 음료 역시 필수재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 정책의 대상 범주인 다섯 개 범주 가운데 교통·통신으로 묶어서 네 범주로 한정했다.²⁾

1) 주거비에는 실제 임대료, 귀속임대료(Imputed rent), 주택 유지 및 수선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연료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분석에서는 귀속임대료를 주거비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귀속임대료를 소비지출에 포함할 경우, 유럽 국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HBS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은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31.7%로 귀속임대료를 제외할 때(19.6%)보다 12.1%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귀속임대료 관련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물론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생활 분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지 영역에 포함된다. 더욱이 식품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에 포괄되는 영역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복지(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등 다른 지출 영역도 대부분 이번 분석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보고서는 사회 정책의 영역을 다소 협소하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한정했다.

다섯째, 자료 분석 연도는 2015년도로 정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가계동향조사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9년 혹은 2020년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구별 소득값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구간 변수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 변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값이 제공되는 가계동향조사(분기) 자료는 연간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간 소득 통계가 확보되는 2015년 자료를 활용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의 2015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유럽 가구지출설문의 2015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자료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5년마다 생성되는 HBS 자료의 2020년 데이터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 시점보다 7년 앞선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고로 영국은 HBS에 2015년 자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2010년 자료를 사용했다.

여섯째, 한국이나 유럽 국가 가구들의 총소비지출액 대비 개별 소비지출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가구별 비율을 구한 뒤 평균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전체 가구의 특정 지출액을 합산한 값을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액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해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한 나라에 A, B 두 가구만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방식대로 총소비지출액 대비 교육비 지출액 비율을 구하면 $70\% [0.7 = (A\text{가구 비율 } 0.4 + B\text{가구 비율 } 1.0)/2]$ 가 된다. 두 번째 방식대로 계산하면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약 40.5%가 되는데, 계산식은 $0.405 \approx (4,000 + 100)/(10,000 + 100)$ 이다. 두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특정 지출 비율을 재는 두 가지 방식

구분	총소비지출액	교육비	가구 비율 평균 기준	전체 가구 전체 지출액 평균 기준
A가구	10,000	4,000	$0.4 (= 4,000/10,000)$	
B가구	100	100	$1.0 (= 100/100)$	
합계	10,100	4,100	$0.7 (= (0.4+1.0)/2)$	$0.405 (= 4,100/10,100)$

자료: 필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전체 소비지출과 함께 계산식에 들어가는 소득이 0인 가구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는 예를 들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0인 가구가 46가구 있었다. 소득이 0인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고 지출액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소득 대비 특정 범주 지출액 비율은 지나치게 큰 수치가 되고, 이러한 가구들의 비율이 전체 평균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경상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이 200%가 넘는 가구가 26가구 있었다.

일곱째, 소득 기준은 총소득, 엄밀히 말하자면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³⁾으로 산출했다. 김기태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을 국제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했으나, 유럽 가구지출설문에서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통계청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총소득 기준을 활용했다.

여덟째, 소득 및 모든 지출 항목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균등화했다. 교통 및 통신비는 균등화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가구 지출 부담을 반영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통일성 측면에서 모든 비목을 균등화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기태, 정은희,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박은정, 송지원. (2019).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통계청. (2020).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대전: 통계청.
- Eurostat (2021. 9. 14.) RE: Re:RE: An inquiry regarding HBS datasets from KIHASA - RPP73/2021 - HBS 이메일 답변.

3) 소득 변수(EUR_HH095)의 범위에 대해 유럽연합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각 국가에서는 연간 기준의 소득값을 제공하며, 따라서 비경상소득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즉, 분석에 활용한 소득 변수(EUR_HH095)는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값으로, 경상소득만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HBS는 소비 관련 자료를 주로 담아서, 가처분소득과 같은 자세한 소득 자료는 담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 통계청은 연구진이 보낸 문의 사항에 대한 답신에서 복권과 같은 비경상소득도 소득 변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유럽 국가들에서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 값을 보내면서 비경상소득도 대체로 포함한다. 일부 극단값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유럽연합 통계청은 HBS 자료상에 나타나는 극단값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Eurostat, 2021. 9. 14. 이메일). 이 연구 과정에서도 일부 극단값이 발견되었으나, 연구진이 검토한 결과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하나의 값을 제외하고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유럽연합 통계청에서 극단값을 조정할 결과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실제 분석 과정에서 평균값을 좌우할 정도의 극단값은 찾기 어려웠다. 셋째, 일부 매우 큰 값도 실제 소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